
	<h1>보 도 자 료</h1> <h2>9.2(수) 11:00부터 보도 가능</h2>	
---	--	-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구조개선지원과 예금보험공사 리스크관리기획실			
책 임 자	전요섭 과장(2156-9450) 조양익 실장(758-0231)	담 당 자	안남기 사무관(2156-9453) 강호성 팀 장(758-0232)	
배 포 일	2015. 9. 1.(화)	배포부서	정책홍보팀(2156-9542~48) 홍 보 실(758-0032~35)	총 3매

제 목 : 예보, 조사·공동검사 관행 개선으로 금융회사 부담완화

- 사전 부실예방에 중점을 둔 조사공동검사 실시 및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 강화
- 금감원과의 공유자료 우선 활용, 위험도에 따른 점검기간 단축 운영
 - 수검 자료작성 등 금융기관 수검 부담 ↓
- 금융회사 의견진술권 확대, 사외이사 면담, 권익보호담당역 확충
 - 금융회사와 소통 ↑,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↑
- 조사공동검사 실시부서와 심의부서 분리를 통한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

-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과 정보공유 확대, 공동검사시 단일검사반 운영 등 금융회사의 부담감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·개선해왔으나,
 - 예보의 조사·공동검사(이하 '현장확인')가 금감원과 중복되어 금융회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
 - 또한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부실의 사전예방을 위한 예보의 조사·공동검사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증대
- 아울러, 금감원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최근 감독당국이 발표한 「검사·제재 개혁방안」에 동참하고자 예보의 조사·공동검사 업무관행·방식을 재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였음

□ 예보의 「조사·공동검사 관행개선 및 업무효율화 방안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
가. 조사·공동검사 틀의 변화 : 경영전반 · 준법성 검사 → 사전 부실예방

① 현장확인 중점을 경영전반에 대한 포괄적 점검이 아닌 사전 부실 예방에 두고, 보험사고 위험요인 파악에 역량을 집중

* (현행) 업무전반의 위법·위규사항 → (개선) 급격한 자산·부채변동 및 편중 등 위험요인 점검

② 현장확인 前 서면분석을 강화하고, 현장확인 後 금감원을 통한 강제적 시정조치 요구보다는 금융회사 자율개선 유도에 초점

* (현행)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금감원에 시정조치요구 → (개선) 경미한 위규사항 등은 현장에서 금융회사 자율개선 유도

나.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

① 보험사고 위험정도에 따라 점검기간을 단축 운영

* (현행) 평균 3주 내외 → (개선)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경우 평균 2주 내외

② 금감원 공유정보 및 공시정보를 우선 활용하여 자료작성 부담을 완화

③ 현장확인 결과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분리통보제*를 활성화

* 공동검사 결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정 사항에 대하여 일부를 분리하여 금융회사에 통보하여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는 제도

** 통보 소요기간 단축 : (현행) 평균 9개월 → (개선) 평균 4~5개월 예상

④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확인서·문답서의 징구를 지양하고, 기안문서, 전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원칙 확립

다.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및 소통 강화

① 현장확인 실시 전 검사원의 검사 예절·청렴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,

② '12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인 권익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권익 보호담당역*을 확충하여 모든 점검대상 기관에 직접 방문·안내 실시

* 예보 사내변호사가 담당, 조사·공동검사 실시 중 해당 금융회사의 고충을 처리

- ③ 금융회사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과정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허용하고, 현장확인 실시 후 예보 내 주요 절차별 진행경과*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

* 시정조치 요청사항의 심의회 상정 사실 및 의견 진술권 안내 등

- ④ 현장확인 실시 부서와 심의 부서를 분리하여 시정조치 요청사항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

□ 금번 개선방안을 충실히 실행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해나감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

<별첨> 조사·공동검사 관행개선 및 업무 효율화 방안

조사 · 공동검사 방식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주요내용

	종 전	개선 방안
조사 및 공동검사 틀의 변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영사항전반 포괄적 점검 • 외부 위험요인 분석 및 현장확인 연계 미흡 • 금감원 앞 시정조치 요청을 통한 개선 유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전 부실예방에 중점을 둔 점검 • 위험요인 사전 분석 강화 • 금융회사의 자발적 개선 유도
금융회사 부담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장확인 전 수검자료 일괄 요구 • 자산규모 등 외형에 따른 점검기간 설정 • 관행적 확인서·문답서 징구 ('15년초 폐지) • 예보 단독조사 후 금감원 확인검사 • 조사 및 공동검사 결과의 일괄 통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감원 공유정보 및 공시 정보 우선 활용 • 보험사고 위험성 정도에 따라 점검기간 단축 • 확인서 · 문답서 대신 조사·공동검사 의견서 교부 - 객관적 증빙자료 수집 원칙 확립 • 금감원협의를 통해 지적사항별 증빙자료를 정형화하여 확인검사 부담 완화 • 시급한 시정필요사항의 분리통보 실시
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및 소통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시부서장 재량의 청렴 교육 • 권익보호담당역 1인 운영 - 서면 또는 현장방문선택 • 점검기간 중 상근 임직원 위주의 비정기적 면담 • 서면 위주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• 결과 확정 후 통보 • 조사·공동검사 실시부서의 결과 심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점검예절/청렴교육 의무화 · 규정화 • 권익보호담당역 및 담당직원 확충 - 원칙적 현장방문 실시 • 점검기간 중 임직원 수시간담회 개최 및 사외이사 면담 실시 • 심의시 출석 · 서면의견 진술 가능 • 결과 진행사항 통지제도 도입 • 실시부서와 독립된 결과심의 제도 도입